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목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날짜 2023. 09. 07. (총 2 쪽)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지난 6월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가리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악용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태원 헬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 대표와 박 의장 모두 자신의 막말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도 모자랄 집권여당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에 보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모두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중진들은 연일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일쑤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은

유가족과 피해자,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까지 방해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망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함께하는 시민들은 그때로 퇴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4.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가·사회적 재난 참사까지도 색깔론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 행위야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공식 사과하고, 색깔론과 혐오적 망언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당장 협조하라. 끝.